

전문건설업 자금난 숨통 틈을 해법 시급

기사입력 2012-03-28 13:21:54 |

폰트   

정책연, 전문공조 담보운영자금 활성화 제언

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에 신음하는 전문건설업계의 숨통을 틈을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.

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8일 '담보운영자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'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.

건설경기 침체와 재정투자 감소 등의 여파로 최근 3년간 전문건설업계가 꼽은 최대 경영애로는 수주활동 어려움이었고 자금조달 문제가 3년 연속(2008~2010년) 2위로 꼽혔다.

전문건설협회가 자체 모니터단을 통해 시행한 전문업체 설문에서도 자금사정이 비슷하거나 악화됐다는 응답비율이 3년 연속 80%(2008년 83.3%, 2009년 80.9%, 2010년 84.7%)를 넘었다.

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표자 개인자금을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도 2008년 33.5%, 2009년 35.2%, 2010년 37.1%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.

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 문턱이 높아진 데다 건설업 부실 우려마저 고조되면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은 2008년 44.5%, 2009년 43.3%, 2010년 41.1%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.

이로 인해 중소 전문업체 중에 보유부동산 매각, 사채시장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늘리거나 대표자 개인자금에 더해 친지 등의 자금까지 끌어쓰는 비중도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.

이런 비정상적 자금조달은 기업부실이나 독단적 경영으로 이어져 진행 중인 공사 차질과 보증기관의 추가적 비용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다.

연구원은 벤처기업, 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정책자금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건설업 특성을 고려할 때 최적의 자금지원 대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담보운영자금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.

조합원 자금조달 애로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금융권의 담보대출 시장 진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 자체를 전문공조에서 의뢰했을 정도로 공조 역시 관심이 크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.

연구원 설문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주된 용도가 자재구입(70.1%), 건설기계 사용료(15.2%), 근로자임금(13.0%) 등의 순으로 조사된 점까지 고려하면 공사 차질을 최소화하고 건설근로자 임금을 적기지급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.

박광배 책임연구원은 "담보운영자금 특성상 수혜대상이 충분한 담보를 가진 중대형 업체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조합, 정부에 더해 전문업계도 금융권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"이라고 설명했다.